

잇따르는 해킹사고… 전남광주지역도 ‘비상’

지자체 3년간 4289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역부족 사건 발생·검거도 해마다 증가세…“보안수칙 준수”

금융권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이어지면서 전남광주 지역의 사이버 보안에도 비상이 걸렸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남광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해킹 시도는 모두 428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경우 2022년 707건에서 2023년 287건, 2024년 185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전남은 2022년 850건에서 2023년 156건, 2024년 120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실제 경찰에 접수되는 해킹사고도 적지

않다.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해킹사고는 2023년 50건에서 2024년 93건, 2025년 9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9월 까지 95건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에 육박했다.

검거 건수는 2023년 10건, 2024년 20건, 2025년 25건 올해(9월 기준) 21건으로 파악됐다.

전남에서도 2024년 60건의 해킹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2025년 39건, 올해는 9월 까지 52건이 확인됐다. 검거 건수는 2024년 14건, 2025년 6건, 올해 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조사결과 해킹의 상당수는 타인의

계정을 탈취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에 침입하는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물건 판매글을 올린 뒤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계정 탈취가 곧바로 사기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쿠팡과 SK텔레콤, 티빙 등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진 데 이어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격까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가 여러 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가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접근하거나, 정상적인 대출 상담을 가장해 추가 정보를 빼내는 방식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전남광주특별시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 해킹 시도를 막고 있지만 고작 21명(광주 12명·전남 9명) 규모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해킹사고와 관련해 우려했던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해 소비자정보를 발령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 상담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가장해 접근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와 앱 설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도 최근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중심으로 4개팀, 28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 상당수가 공격자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우회·세탁용으로 확인되면서 국제공조를 통한 추적에도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킹을 단순한 시스템 침입이나 기업의 보안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의 행정정보부터 기업의 고객정보, 개인의 계정정보까지 연결된 만큼 하나의 침해사고가 개인정보 유출과 계정도용, 금융사기 등 연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계정도용을 통한 판매 사기처럼 비교적 단순한 범죄부터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까지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보안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지 말고,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앱 설치나 송금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코스모스 꽃길 따라 걷는 가을 산책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 황룡강 생태공원에서 열린 ‘2026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장을 찾은 김한중 장성군수와 관광객들이 활짝 핀 코스모스 꽃길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황룡강을 따라 조성된 약 3.2km의 꽃길에는 다채로운 데마로 무려진 주체정원에 코스모스와 백일홍 등 화려한 가을꽃이 강변 수변 공간과 어우러져 장성의 가을을 대표하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광주기상청, 준강간미수 직원 처분 ‘도마’ 파면 대신 해임…중대 성비위 개인 사정 징계 감경 ‘부적절’

광주지방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하급자를 대상으로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기상청 소속 A씨는 지난 4월 8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해임됐다.

징계 과정에서는 직위해제로 인한 경제 적 어려움과 가족 부양 사정 등이 참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상 고의성이 명백한 중대 성비위는 파면이 원칙이다.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가 일부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만, 해임은 퇴직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공무

원 임용 제한 기간도 3년이다.

특히 공무원의 성비위는 공적 감경 대상에서 제한되는 만큼, 김 의원은 중대 성비위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최근 5년간 성비위를 포함한 모두 4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7일에는 성비위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직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갑질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기상청 전체로는 불법촬영과 준강간미수 행, 준강간미수 등 성비위로 직원 3명이 해임된 것으로 집계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나주 부부 강도살인 혐의 50대 구속…신상공개 검토

범원 “도주 우려”…피해자 현금카드 600만원 인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나주경찰서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부터 오후 11시57분 사이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B씨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피해자 부부의 현금카드를 가져가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자전거와 피해자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 등을 번갈아 이용해 도주했다. 지난 7일 주거지인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계획범죄 여부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체포 당시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두꺼운 외투를 입고 범정에 들어섰다.

경찰은 A씨가 흥기를 영상강간에 버텼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흥기를 사전에 준비했는지와 범행 전후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계획범죄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오는 13~14일 개최 계획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혐의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최근 사례로는 2024년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의 박대성(당시 32세)이 있다. 박대성은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오는 13~14일 개최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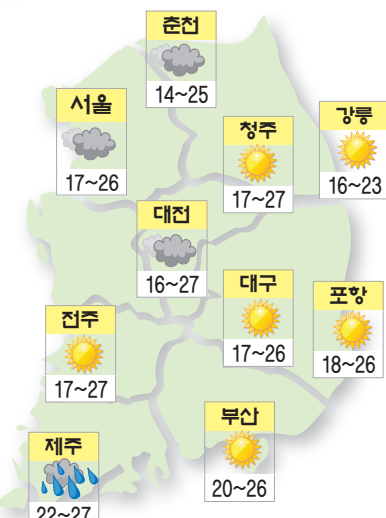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혐의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최근 사례로는 2024년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의 박대성(당시 32세)이 있다. 박대성은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6:36	달달	08:02
☀️	예보	18:02	달달	18:34



광주	☀️	17~28
목포	☀️	18~26
여수	☀️	18~25
순천	☁️	17~26
구례	☀️	14~27
광주	☁️	18~26
진남	☀️	19~25
진남	☀️	18~24
진남	☀️	18~25
진남	☀️	18~25

목포	☀️	05:31 / 17:52
여수	☀️	11:47 / ---
여수	☀️	02:52 / 15:23
여수	☀️	08:03 / 20:29

누범 기간 식당서 행패

만년필 ○··누범 기간에 식당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화분까지 부순 70대에게 실형이 내려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유나 재판장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7시 3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한 곰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 B씨(21)에게 욕설하고, 업주의 팔을 잡아 밀친 혐의로 기소.

A씨는 업주의 모친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한 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고했지만 식당 앞에 눕는 등 귀가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식당 측은 배달 주문과 예약 손님을 받지 못한 채 영업을 일찍 종료했다고.

또 A씨는 같은 날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분을 넘어뜨리고 수차례 발로 밟아 파손했다고.

재판부는 “A씨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거점병원’ 전남대병원 4대 필수의료 적자 심각

중환자실 396억 손실…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도 수십억 응급의학과도 마이너스…금융부채 273억·이자비용 급증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남대학교병원의 적자 규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환자실은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397억원에 육박했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도 수십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

훈 의원이 전국 주요 국립대학교병원의 적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의 중환자실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모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누적 적자 규모가 396억62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자는 2023년 113억9900만

원, 2024년 150억1000만원, 2025년 132억5300만원이었다. 이는 수익보다 높은 인건비와 위생·진료재료비 등의 비용 부담에 따른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38억6600만원, 2024년 43억500만원, 2025년 41억7600만원으로, 3년간 누적 적자는 123억4700만원이었다. 수익에 비해 인건비와 주사약품비 등 재료비를 중심으로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산부인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3년 45억4100만원, 2024년 46억4300만원, 2025년 33억2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3년 누적 적자는 125억9000만원이었다. 인건비 부담이 큰 데다 재료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응급의학과는 2023년에는 26억8100만원의 흑자를 냈지만 2024년 12억9400만원 적자로 돌아섰고, 2025년에는 적자 규모가 23억98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의료공백 장기화도 상당했다. 전남대병원의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 등 8개 주요 필수

의료의 채용계획 대비 실제 채용률(올해 8월 기준)은 46.2%(52명 중 24명)에 그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적자가 병원 전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대병원의 누적 차입금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273억원이었다. 연간 이자비용도 2023년 1억9000만원에서 2025년 12억원으로 급증했다. 2년 만에 6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역 국립대병원 전체의 재정 상황도 심각하다. 전국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의 금융부채는 1조5824억원에 달한다.

반면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은 의료수익 회복 등을 바탕으로 적자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적자를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별도의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의 중심인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빚으로 빚을 둘러막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의 거점병원 육성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운영자금 차입금에 대한 저리 대환대출과 이자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